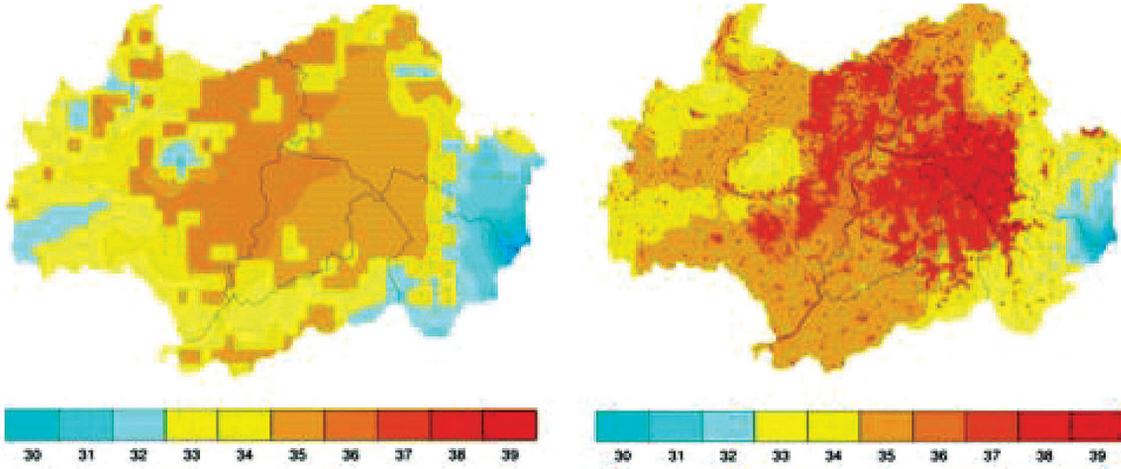


광주, 열돔에 갇혔다

고층건물·포장도로 비율 급증
열 순환 정체 폭염 해마다 심해져
고온지역 도심서 외곽으로 확산
체감온도 36~37도·열지수 24
곳곳 큰 나무 심고 녹지 확보해야



광주시의 2022~2024년 지표면온도(오른쪽)가 2019~2021년에 비해 평균 2~3도 상승한 것을 보여주는 지표면 열분포도. 고층건물 밀집도가 높은 서구 등지는 38도 이상으로 지표면 분포도에서 붉게 표시되고 있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제공)

■ 열지수에 따른 위험도

열지수	구분	지속적인 노출시 위험사항
27이하	안전	신체활동시 피로 위험도 낮음
27~32	조심	신체활동시 피로 위험 높음
32~41	주의	신체활동시 열사병, 열경련, 열피해 가능성 있음
41~54	위험	신체활동시 열사병, 열경련, 열피해 가능성 높음
54이상	매우 위험	열사/열사병 위험 매우 높음

광주도심 외곽도 기온상승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019년~2021년 외곽지역지표면 온도는 평균 30~32도를 기록하며 도심과 4~6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22~2024년 평균 33~34도로 상승했으며, 이전보다 1~2도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녹지와 산림이 분포된 도심 외곽에서는 온도 상승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나, 도심과 외곽 지역간

온도차가 이전보다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체감온도와 불쾌지수를 끌어올리는 습도도 덩달아 오르는 현상이 관측됐다. 습도 역시 2019년~2021년 도심평균 72~76%대 분포를 보였다. 2022~2024년에는 평균 76~80%로, 이전 시기보다 4%정도 상승했다. 실제 2019~2021년과 2022~2024년 도심 체감 온도는 평균 2~3도 상승(2019~2021년 35~36도 → 2022~2024년 36~37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4도 이상 상승했다. 온도와 상대습도를 조합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강도를 수치화한 값인 열지수도 증가했다. 2019년~2021년 광주도심은 평균 22~24의 열지수를 기록했고 중심부 일부 지역에서는 24를 초과하는 고열 분포를 보였지만, 2022~2024년 열지수는 24~25로 상승했다. 고열 지역이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외곽 지역도 열지수가 대

부분 1~2 상승 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도심과 외곽 간 열환경 지표 차이가 소폭 축소되는 경향은 도시 확장과 주변부 개발 영향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곽지역도 기존 대비 온도 상승이 진행 중이므로, 산림·녹지 보호와 함께 도심과 외곽을 연계하는 통합적 열환경 완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광주는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상태지만 열돔현상을 완화하려면 도심 곳곳에 작은 녹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잔디나 꽃을 심기 보다는 키 큰 나무 등을 심어 바람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빈집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기후환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내란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법정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파견된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물 관련 정보 삭제 등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해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첫 추정 광주 994억·전남 2043억원 반영

광주, 호남고속도 확장 일부 복원
전남, SOC 분야 3개 사업에 집중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 광주·전남 핵심현안 예산 994억원과 2043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착공 예산 일부는 북

원됐지만,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용역 예산은 전액 누락됐다. 전남의 호남고속철 2단계 등 SOC 분야 3개 사업 1460억원이 반영됐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원도 편성됐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광주시·전남도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광주의 주요 반영예산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715억원, 도시철도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11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IC) 확장 사업비 복원 183억원 등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동광주~광산IC 구간)은 국비 366억원 중 절

반이 배정됐다. 그동안 광주시는 국·시비 분담비율(5대5)이 재정압박 요인이라며 확장사업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시민여론을 수렴해 당초 입장을 변경했다. 일단 광주시는 현재까지 부담해야 하는 비용(366억원)을 집행하면서 국비를 추경안에 반영시킨 것이다. 광주시는 착공 후 광주시 부담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1년에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꿔야 할 상황이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개장 첫 주말, 여수 해수욕장 피서객 급증 ▶6면
'방망이 쇼' 프로야구 호령하는 KIA 김호령 ▶18면
광복 80년 - 무안 면화재배지에 비행장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